윤석열, 대선 두 달 남기고 '최대 위기'… 선대위 개편 숙고

새해부터 선대위 전면 쇄신 숙제
김종인의 '전면 쇄신안' 수용 주목
尹-金-李 갈등 봉합 여부 변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최대 위기를 맞았다. 선거를 불과 60여일 앞두고 리더십과 선거대책위원회 쇄신이라는 숙제를 떠안게 된 것. 윤석열표 선대위 쇄신은 특히 윤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준석 당대표 간 갈등 봉합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윤 후보는 지난 3일 오전 돌연 일정을 취소한 이후 하루 이상을 선대위 쇄신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권성동 당 사무총장은 4일 오전 당사를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가 어떤 체제가 효율적인 선거 운동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며 "자택이든 바깥이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선대위 쇄신과 관련해 "선거를 두 달 남겨 놓고 선대위를 쇄신하라는 것은 선거를 포기하라는 대단히 악의적인 공세"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새해에도 각종 리스크에 후보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당내에서 위기의식이 감지되자 주저하지 않고 당내에 충격파를 일으켰다. 선대위 주요 지도부인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총괄본부장과 후보 직속 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도 후보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3일) 의원총회에선 원내지도부인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직을 내려놨다.

다만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총괄위원장직 사퇴를 번복하고 의총에서 "후보는 연기만 잘해달라"고 발언하면서 윤 후보 측근들의 반발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발언을 두고 김 위원장이 윤 후보의 무능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비판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수동 사무실을 나서면서 "(후보와) 의견이 다른 부분은 전혀 없고, 후보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윤 후보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준석 대표는 잠행을 감행하면서 김 위원장이 선대위에 합류하는 명분을 만들어줬으나 이후 선대위에서 사퇴하고 외곽에서 공격적인 제언을 하며 재차 쇄신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조수진·김재원 최고위원, 장제원 의원, 권성동 사무총장과의 갈등도 나타났다.

이 대표는 최근 선대위 '전면 해체'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당내에서 '책임론'에 직면하는 상황이다. 윤석열이 겪고 있는 위기에 이 대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불참한 의원총회에서도 '이준석 사퇴'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석준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들은 4일에도 의총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김기현 원내대표의 만류로 열리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을 나서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론에 대해 "찾아와서 말씀해주시면 논의하겠다"라며 선을 그었다. 권 사무총장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이 대표가 사퇴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입장 표명도 아니고 무엇이냐"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편, 선대위에서 김 위원장을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 윤 후보가 결심을 굳혔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김은혜 공보단장은 취재진에게 "그 보도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4일 본지와 통화에서 "들은 바 없다"며 부인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최대 위기를 맞으며 리더십과 선거대책위원회 쇄신이라는 숙제를 떠안았다. 사진은 일정을 잠정 중단한 윤 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후 나서는 모습. /뉴시스

임기 마지막해 국무회의… 文 "끝까지 책임"

"대격변 시대, 헤쳐나가야 하는 시기"
코로나 대응·소상공인 보상 등 과제

2022년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였다.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세계 경제·무역 질서도 급변하는 만큼 정부가 긴장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 임기가 4개월 남았다며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긴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가 엄중하고 대격변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돼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정부가 해야 할 일로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 대응 ▲소상공인 보상·지원 ▲세계 경제 구조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대응력 향상 ▲급변하는 무역 질서·통상 환경에 능동적인 대응 ▲물류난 및 공급망 리스크 대비 ▲수출 시장의 전략적인 확대 및 무역 장애 요인 해소 등을 꼽았다.

지난해 한국이 기록한 무역 규모 1조 2000억달러, 역대 최초 15대 주요 품목 모두 두 자릿수 성장, 두 달 연속 600억달러 수출 돌파 등 역대급 기록을 남겼지만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에 "공급망 안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급망 문제가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이지 않고 상시적으로 잠재된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됐고, 국제정치·안보 이슈까지 결합돼 복합적인 양상을 띄게 된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정부에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생산 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 중장기적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긴장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월 발효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포함, 자유무역협정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수출 시장도 전략적으로 넓혀나아가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 밖에 올해 처음 시행하거나 지원이 확대되는 제도인 ▲첫만남이용권 및 영아수당 ▲아동수당 확대(만 8세 미만) ▲7대 급여 보장 수준 향상(기존 중위소득 수준 인상)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 ▲배달노동자·대리운전 기사 등의 고용보험 확대 적용 등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청년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점을 언급한 뒤 ▲월 20만원 월세 지원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 완전 실현 ▲청년 내일저축계좌 및 희망적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년 더 연장 추가 지원 ▲군 병장 월급 인상(올해 67만원)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 3분의 1 정부 추가 지원 등 제도에 대한 소개도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김재원 "의원들이 당지도부 사퇴 요구시 따를 것"

〈국민의힘 최고위원〉

"당내 의원들의 입장 중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사진**)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총사퇴를 주장하고, 그렇게 결정된다면 저는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4일 말했다.

이에 앞서 전날(3일) 저녁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 지도부에서 자신과 갈등을 일으킨 김재원·조수진 최고위원에 대해 "만약 조수진·김재원 최고위원이 대의를 위해 희생을 선택하면 당헌당규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체 멤버를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이준석 대표의 전날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원내지도부가 사의 표명을 한 상황에서 당내 의원들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사실 원내지도부가 대선 국면에서 잘못했다거나 실수를 했다거나 또는 차질을 빚은 적이 없다"며 "오히려 당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온다거나 차질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의사결정 주체가 무너져버리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 사퇴가 이 대표까지 포함되느냐는 질문엔 "대표가 결정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으나 "지금까지 혼란을 일으킨 것에 책임을 느껴서 저는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쇄신 작업에 대해서 "모든 것이 사람을 단순히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후보가 국민에게 잘 드러날 수 있게 하고 선대위는 그 뒤에서 조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선대위를 개편하면 후보가 전적으로 드러날 수 있고, 뒤에서 적전분열 현상처럼 보이거나, 다른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후보자가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잘 개편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는 가능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박태홍 기자

이재명 후원회 출범… "클린선거에 최선"

후원회장에 정세균 전 총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클린 선거를 위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후원회의 출범을 알리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4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이 후보와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깨끗한 선거, 투명한 선거, 국민과 함께 하는 선거의 모범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후원회 후원회장은 정세균 전 총리가 맡는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 전 총리는 민주당의 큰 어른이자 이재명의 오랜 동지"라며 "한국 정치를 대표하는 깨끗한 정치인이자 각계의 고른 지지를 받는 통합의 정치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세균이 이끄는 이재명 후원회는 하나 되어 앞으로 나아가는 '드림팀 민주당'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후원회는 특히 청년과 함께 하는 선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2030 청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후원 방법과 캠페인을 개발하겠다"며 "소중한 후원이 후원으로 그치지 않고 후보 및 선대위와의 소통,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의 이재명 후원회가 청년의 정치 참여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코로나 위기 속에 치르는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로 이재명과 민주당은 밖으로는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정책 선거, 안으로는 국민과 함께 하는 클린 선거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